

# 16

## 환경행정의 선진화

- 환경여건의 변화와 환경행정체계
- 당진군 환경행정 조직과 업무
- 당진군 환경행정 효율화 방안

## 제16장 환경행정의 선진화

### 1. 환경여건의 변화와 환경행정체계

#### 1)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sup>1)</sup>

- 2007년 스텐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면 경제 대공황에 직면할 것으로 기후 변화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현재 전 세계는 자원, 에너지 소비 확대와 기후변화 등 환경비용의 증가에 따라 심각한 자원위기와 환경위기를 맞고 있음
  - 이러한 환경위기는 우리에게 기존의 자원 및 에너지 다소비형, 기후과괴형, 물량위주의 경제사회 체제에서 자원절약형, 에너지 저소비형, 기후친화형 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대응하여 EU, 일본, 미국 등 환경선진국들은 자원절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체제로 경제구조를 급속히 개편하고 있으며, 자국의 앞선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신설하여 신흥개도국을 견제하면서 세계 환경시장의 선점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저탄소 경제사회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환경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임
- 반면, 국내 환경여건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도시의 녹지와 공원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며, 특히 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녹지는 4.9㎡로 워싱턴(50㎡), 빈(25㎡), 런던(9㎡)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인구의 대도시 집중에 따른 도시열섬 현상, 교통 혼잡, 에너지 소비 등 도시환경문제 악화로 도시민의 삶의 질이 점차 저하되고 있음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 배려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함
  - 위생성 결과를 활용한 통합 환경기준 마련과 배출원 관리가 필요하며, 유해대기오염물질이나 실내 공기질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대응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임
  - 또한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로 인해 대도시 뿐 아니라 산단 주변의 오존오염 심화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08 환경백서 재구성

-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국토개발로 동식물 서식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계획을 토대로 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이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각종 국토 개발로 인한 등 생태계 교란 요인이 증가하여 하천 및 해양연안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상수도 보급 확대에 비해 노후 수도관 개량, 옥내 급수관 관리 등 수도물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약함
  - 또한 축산분뇨, 산업폐수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COD, 총인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수질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조직체계 정비노력 추진
  -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면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구심체 역할 수행
  - 시도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및 녹색성장책임관의 설치를 통하여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 수행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 과학기술, 민간단체 등과의 다양한 협의체가 구성되어짐
-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짐
  - 환경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으로서 국제적인 선도 입법사례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요소 투입형 개발경제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법입
-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녹색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함
  - 저탄소사회 및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고나 계획을 종합적으로 포괄하여 정부차원의 녹색성장 중장기 정책목표, 추진전략, 주요 전략별 핵심정책 및 중점 추진과제, 재원투자계획 등을 발표하였음
- 주요 정책영역별 녹색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계획들의 수립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들이 수립되어짐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3)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1) 환경행정체제

- 환경정책은 국회에서 제정된 환경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관련 행정부서를 통하여 집행하고 있음
  - 각 부처 주요정책의 수립추진시 개발과 보전의 사전 조율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제안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 합동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환경정책은 중앙정부의 부처·청과 지자체가 분산수행하고 있어 결정 및 집행체계가 매우 복잡함
  - 즉, 환경부를 비롯한 8개의 중앙부·처·청, 유역(지방)환경청, 시·도 및 시·군·자치구 그리고 그들의 소속기관, 투자기관 등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

(2) 환경부

-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주무부처이며,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및 8개 지방환경관서를 두고 있으며, 산하공공기관으로는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두고 있음
  - 참고로 환경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 본부

- 종합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직접 담당하는 환경부는 2010년 10월 현재 2실 3국 7관 32과 4팀 1기획단(‘10.10월 현재 정원 52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환경법령의 제·개정, 환경관련 제도 도입 등 국가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행정 기본체계의 확립, ② 환경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③ 각종 규제기준의 설정, ④ 지방환경관서 및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⑤ 남북간 환경협력 ⑥ 국가간 환경보전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

- 환경부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1급 상당, 상임)과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쟁조정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10.10월 현재 정원 21인)을 두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

- 국립환경과학원은 매체 통합적 연구 등 환경부의 정책수립 지원에 필요한 연구 및 기초 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5부 15과 5연구소 2센터('10.10월 현재 정원 318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립생물자원관

- 2007년 2월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2부 8과('10.10월 현재 정원 102인)로 구성되어 있음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환경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연수부)으로부터 분리되어 환경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2과('10.10월 현재 정원 30인)로 구성되어 있음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 계획의 수립조정,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계획의 수립조정,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발족하였으며 3팀('10.10월 현재 정원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환경관서

- 4대강 수계 유역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과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 및 8개 환경출장소(부산, 울산, 구미, 포항, 청주, 여수, 경인, 춘천)를 두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두고 있음('10.10월 현재 정원 780인)
- 지방환경관서는 ① 영항권별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사전환경성검토 협

- 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③ 자연생태계 보전 등 자연환경보전, ④ 환경오염원 조사 및 환경오염도 측정·분석, ⑤ 환경관련산업체 육성·지원, ⑥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 관리, ⑦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환경관서 중 한강 등 4개 유역환경청은 이외에도 수계관리위원회 운영, 수계관리기금의 운용, 자치단체 수질개선사업의 승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평가, 전용수도사업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수계 특별법에 의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전예방적·광역적인 수도권 대기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음

(3) 관련 중앙행정기관

- 환경업무는 복잡다양하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환경부 단독으로 모든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 외에도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일부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 환경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국토이용계획, 수량관리 및 하천관리, 대기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정책 및 해양오염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되는 에너지 수급정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체에 대한 육성 및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등이 있음

(4) 지방자치단체

- 환경행정업무와 기능은 중앙과 지방이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음
  - 환경부는 환경관계법령의 제정과 규제기준의 설정 등 환경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그 집행책임은 지방환경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① 관할구역내 지역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시행,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처리, ③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④ 소음·진동 및 자동차배출가스 규제 등 고유 업무와 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⑦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환경행정 기구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나, 16개 광역자치단체는 환경녹지국, 환경국 또는 환경과 문화관광해양 등을 통합한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과 또는 지역별로 해양도시 기능 등을 통합한 부서를 설치하여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진군은 환경위생과를 설치하고 있음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2)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의 문제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자치제될 시행하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지배적인 경향이 강하며 환경행정체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방환경정책의 추진체계상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문제
  -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의 권한과 재량권이 부족하고, 중앙과 지방간 환경행정기능의 위임 내지 이양이 부적절함
  - 중앙정부의 환경행정기능 분산은 중앙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약화를 초래하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 분산 역시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은 개별행정의 보조행정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더 심각함
-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문제
  -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조체계가 부족하여 상호배타적 기관할거주의가 존재함
  -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가 중복되고, 권한책임관계가 모호하여 양 기관간 주도권 다툼과 책임회피 등 갈등관계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지원조정기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환경청 자체의 문제
  - 환경청의 애매한 위상으로 인해 지역환경관리의 책임 있는 주체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청 스스로 유역단위의 환경정책을 광역적으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토대가 열악함
  - 중앙정부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역밀착형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유능한 중앙공무원의 지방청 파견에 대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본부(환경부) 지향적 인사행태와 중앙 우월적 의식이 자리잡고 있어 지방청 근무자의 사기가 낮은 것도 문제임
-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문제
  - 환경행정조직의 위상이 매우 약하여 환경행정은 지역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정책에 대한 제어장치나 위상을 갖지 못하고, 단지 '청소행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환경행정 업무배분에 따른 인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업무수행능력과 관리능력이 미흡하고 지역별로 격차도 심하며 특히, 일반행정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낮고, 인사이동이 잦아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족함
  - 나아가 지역개발 우선정책으로 인해 환경보전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도로건설, 청사건설, 공단조성, 주택단지조성 등을 이유로 지방재정 사정은 더욱 어렵고, 그에 따라 환경시설 투자나 환경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항상 뒷전으로 밀

제 16 장 환경정책의 선진화

제 16 장 환경정책의 선진화

- 러가고 있음
- 즉, 개발우선주의와 지역경제 살리기 논리에 압도되어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개발관련 부서(공적부서)의 환경마인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행정 부서(방어부서)만의 힘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은 역부족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갈등의 당사자이자 관리자로서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 협상, 타협능력도 부족한 것도 문제임
- 지방자치 이후 주민들의 주장이 더욱 거세어 갈등현장에 직면해야 하는 환경부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음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 증가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대응

- 현재의 환경행정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환경행정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환경부 등 환경행정체계가 이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지구 온난화, 사막화 현상, 오존층의 파괴, 장거리 이동 유해오염물질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관련 협약은 환경문제를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제환경협력기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밖에도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기능, 실내 공기질 관리, 수도권 등 도시 대기오염문제, 토양오염문제, 국토 난개발 문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 및 지원, 지하수 관리, 생물다양성 등 유전자원의 관리 등 환경행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행정체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의 주요 원인은 정부 조직개편이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조직 축소지향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임
  - 이러한 지속적 조직과 인력의 감축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는 물론이고 기존의 업무마저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다행히 최근에 환경수요의 확대를 인정받아 조직과 인력확충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음
- 앞으로 지속적인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행정을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위임하고 민간위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유해화학물질, 도시 대기오염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유전자원의 관리, 오염총량관리제 등 사전예방적 환경관리기능, 행정구역단위를 벗어나 하천의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유역관리기능, 온실가스 REACH 등 범지구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등 새로운 핵심기능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행정기능의 통합 고려

-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됨으로 인하여 상호견제 등 긍정적인 측면 보다는 부처 간 갈등, 업무 비효율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커 보임
  - 산림의 자원 측면 만을 주장하는 산림청과 산림을 포함하는 전체 자연생태계 보전을 주관하는 환경부와의 의견차이, 수량과 수질을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르는 물관련 정책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르는 통합여부 논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수급정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대기오염문제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환경부와의 업무상 마찰 등은 그 예가 되고 있음
- 이러한 정부기능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기능의 과감한 조정을 통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합리적인 환경행정체제 마련이 시급함

■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역량제고

- 환경보전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에 힘입어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자치단체 내에서 환경부서의 위상도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자치단체 스스로 환경정책을 결정·집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환경행정 집행력이 아직은 부족하며, 환경행정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환경관리업무가 소위 3D 업종으로 분류되어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이 선거직 자치단체장 때문에 배출업소를 단속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경향도 있음
  - 아울러 아직도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행정조직이 개발위주로 구성되어 환경정책의 우선순위가 개발정책보다 뒤처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화 및 중앙정부의 지도·지원 강화, 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개선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제 16 장 환경정책의 선진화

제 16 장 환경정책의 선진화

2. 당진군 환경행정 조직과 업무

- 당진군의 행정업무는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 농산과와 향만수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및 군정발전기획단과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환경감시사업소 등이 함께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능의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 및 기능의 재조정과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기능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요 환경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와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환경감시사업소 등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환경위생과

- 환경위생과는 녹색환경관리팀, 청소행정팀, 자원재활용팀, 시설운용팀, 위생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녹색환경팀은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청의 일반환경행정과 관련된 포괄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환경단체 및 지방의제 21 지원관리
  -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업무
  - 당진그린스타트 실천운동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 생태공원 조성사업
  -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및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
  - 수질개선사업 및 종말처리시설 사업 관련 업무
  -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
- 청소행정팀은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센터 설치 사업
  - 매립장 관리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 쓰레기 투기 단속 및 행정처분 등
- 자원재활용팀은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 및 친환경상품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 재활용신고 및 지도점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 음폐수 처리시설 및 자원화시설 증설 및 관리
-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 업무
-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업무 등

◦ 시설운영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생매립지 및 관련 장비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위생매립장 관리
- 실험실 및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 매립장 공원조성
- 방역차량 및 기타 시설물 관리 등

## 2)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

◦ 해양환경오염사고대책단은 유류피해배상지원팀과 지역발전지원팀 등 2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류피해배상지원팀은 피해지역 및 분야에 대한 보상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관련 업무는 지역발전팀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 해양오염 종합대책 수립
-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
-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 1사 1연안 가꾸기 사업
- 기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3) 환경감시사업소

◦ 환경감시사업소는 10명의 인원이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관련 지도점검 및 피해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배출업소 지도점검
- 생활민원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 오존 및 황사경보
- 비산먼지, 특정공사 지도점검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 대기측정망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 가족분뇨배출시설 관리
- 공단환경관리

- 산단주변 장기 주민건강영향조사
- 지정, 의료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지도점검 등

## 3. 당진군 환경행정 효율화 방안

◦ 당진군 소관 정책영역에서 녹색성장 전략 및 정책과제를 종합한 “녹색성장 정책비전 및 실천계획”의 수립필요성이 제기됨

-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을 정기적으로 수정하여 보완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또한, 실천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상위 녹색성장 실천과제와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략들은 상위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당진군의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의 발굴과 대내외 조정 및 소통의 역할을 주관하는 녹색환경정책의 직책 도입과 기존의 만관 거버넌스 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의 확산 및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환경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정보화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이를 통해 환경정책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 자료공유 및 대 군민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환경 질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함
- 다양한 환경정보에 대한 맞춤형 종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정보를 업무별·매체별로 분류하고 이를 연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업무시스템의 기능을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한 직원용 환경행정포털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및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를 통한 참여공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환경행정은 그 특성상 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이해집단간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기 쉽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보전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다양한 환경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가 중요함
-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주요정책자료, 환경측정통계 자료, 주요 결재문서 등에 대한 환경정보와 민원방문상담예약, 입지상담 등의 민원서비스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열린토론, 규제제안, 군수와의 대화 등의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군민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및 군 환경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업무-지식-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중심의 지식행정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함

- 환경지식행정은 업무-지식-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관리체계를 업무중심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제 16 장 관 경 정 책 의 선 진 화

- 으로 재정비하고 환경지식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통과 협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함
  - 직원들의 창의적 학습토론 등 문제해결 능력배양, 직장내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지식실천 공동체로서 학습과 변화를 통해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환경과 관련된 현안문제 중심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이해와 공감대 형성, 갈등과 이견극복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환경사진전, 환경미술전, 환경음악대회 등의 행사에 당진군이 적극 개최 및 후원하고 우수자에게 시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에 대한 당진군의 노력과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당진군에서도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및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여야 함